

규제프리존 도입에 따른 입지규제 특례 내용

관계부처 합동
2015. 12. 16.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2015. 12. 16.

정부는 지난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규제프리존' 도입과 특별법 제정 추진이다.

규제프리존은 시·도별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된 핵심규제가 철폐되어 보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으로, 전략산업과 관련된 개발사업 추진 시 입지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입지규제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요건 완화

-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경우 최소면적 요건(1만㎡ 이상) 완화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총량제한 완화**
- 현행 3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복합하여 계획하도록 한 요건을 2개 이상으로 완화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특례 적용

-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
-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 특례*** 적용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 절차 중 중복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개선

현행	GB 해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장·군수)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자문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국토부장관)	1년
	개발 사업	개발계획 입안(입안권자)	주민공람	관계부처 협의	산단계획심의 위원회 심의	개발계획 승인 (승인권자)	1년
개선	계획입안	주민공람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산단계획심의 위원회 심의	해제 및 지정 승인	1년

그 외에도 ▲친환경 산업 입주 시 산단 내 녹지비율 4%p 범위 내 하향 조정 ▲복합 용지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의무비율을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 50%에서 75%까지 시범 완화 ▲친환경 분산전원의 도시공원 내 설치 허용 ▲시·도의 산단 미분양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신규 산단 지정이 제한되는 것을 개선하여, 입주 수요 검증(산업입지정책심의)을 거쳐 지정할 수 있는 특례 적용 ▲수소·전기차 관련 업종의 규제프리존 내 산단 우선입주 허용 ▲대상 부지 조성공사 완료 후 지정할 수 있었던 산업단지 내 외국인 투자지역을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 산단 지정 시 외투자지역 지정 의제하도록 개선하여 적용하게 된다.

* 창의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일률적인 토지이용 규제(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기준 등)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용도구역

**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의 0.5%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추가 허용

*** 자연녹지지역 20% → 30%, 비도시지역 20% → 40%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주거 대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5. 12. 9.

정부가 신혼부부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 대책을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제시하고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2015년 12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3차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비용 지원이나 제도 확충 등 현상적이고 단기적 차원의 대책을 넘어 저출산·고령화를 유발하는 사회구조적인 원인 진단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점이 특징이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

저출산	기혼가구 보육부담 경감	→	일자리·주거 등 만혼·비혼 대책 강화
	제도 도입·기반 조성, 비용지원 위주	→	사각지대 해소, 실천, 문화 개선 초점
고령화	기초연금·장기요양 등 노후 기반 마련	→	국민·주택연금 확대 등 노후대비 강화
	노인복지대책 위주	→	생산인구 확충, 실버산업 등 구조적 대응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별첨 설명자료,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주요 계획, 2015.12.9.

이러한 맥락에서 기혼가정 대상 비용 지원 위주였던 저출산 대책의 방향을 만혼 대책으로 전환하고, 만혼 문제의 큰 장애 요인인 주택 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신혼이나 젊은 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과 자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신혼부부 전용 전·월세 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행복주택 5만 3,000호, 공공임대주택 8만 2,000호 등 모두 13만 5,000호 공급한다. 양적 공급 확대와 더불어 입주자격 완화, 거주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과 자금 지원 또한 이루어진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내용

구분	기본계획 반영 내용	
임대 주택	행복주택	·공급 확대 ·행복주택 14만호 중 5만 3,000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 ·제도 개선 ·예비부부 청약 허용,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 ·행복주택에서 출산 시 더 넓은 행복주택 재청약 지원
	공공 임대주택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대상: 수도권 교통요충지 1,000호 이상 단지 하남미사(1,500호, 2017) 시범사업 추진, 성남 고등(1,000호, 2018), 과천 지식(1,500호, 2019), 서울 오류(800호, 2016), 부산 정관(1,000호, 2018) 등 총 5,800호 추진 ·특화 내용: 50% 이상 투룸형으로 (예비)신혼부부 공급, 아동양육 친화시설* 대폭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놀이방,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승하차 대기 공간, 등하굣길 CCTV, 자녀 안심 자전거길, 차 없는 안전 보행로, 단시간 돌보미 위탁시설, 아이들과 함께하는 단지 내 썬지농장 등
	뉴스테이 (기업형 민간임대)	·공급 계획 ·2017년까지 6만 호 공급 예상
자금 지원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대출한도 상향(수도권 1억 원 → 1억 2,000만 원) ·신혼부부, 2자녀 가구 금리 우대 신설(0.2%p) ·예비부부 신청 편의 제도(결혼 2개월 전 → 3개월 전)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주택 구입 시 0.2%p 금리 우대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독거 노인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공공실버주택을 제공한다. 전세임대의 경우 2016년까지 저소득 고령층에 시세의 30% 수준으로 2,000호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단지 내에 사회복지사·간호사 등이 상주하며 건강관리와 식사·목욕 등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실버주택 또한 도입하여, 2017년까지 1,300호를 공급한 이후 성과를 평가하여 확대할 방침이다.

건축행정 투명화와 건실화를 위한 노력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016. 1. 14.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016. 1. 21.

지자체 대상 건축심의 모니터링 시범 시행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심의 모니터링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심의결과를 공개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외 내용 심의 ▲모니터링 참관에 비협조 ▲광역 통합 심의기준의 미제·개정 등 부적합 ▲도시·교통 등 타 분야와 통합심의 운영 ▲심의제출도서 시스템화 ▲담당부서 심의범위의 적정수준 제한 등의 사례가 조사·파악되었다.

모니터링 주요 결과

주요 점검 사항	적합	부적합	부적합 사례
도서제출 요구	13	7	별도의 구조관련 도서 등 요구
심의결과 10일 내 홈페이지 공개	8	12	심의결과 홈페이지 미게재
심의내용 적합성	8	12	안전과 상관없는 내용 심의
타분야(도시, 교통 등)와의 적합성	16	4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 등

국토교통부는 시범적으로 시행한 건축심의 모니터링의 성과가 크므로, 올해 50여개 지자체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이를 상시화하여 건축심의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평가 실시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2015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를 벌여 경상남도를 최우수기관, 서울시·세종시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를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건축정책 충실 이행 ▲임의규제 정비 ▲민원처리 노력 ▲창의적 건축행정 시행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벌였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상남도는 ‘Top Speed 민원처리’와 ‘건축 민원전문위원회’* 운영으로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하고 민원 수를 대폭 감소 시킨 점,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기에 추진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시는 불합리한 지역 건축규제 21건을 신속하게 정비한 점, 세종시는 ‘알아두면 유익한 건축알림이’를 제작·배포하여 접근성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건축법령 운영 및 집행에 대한 민원처리 적법성 여부 판단(광역 및 기초 지자체 설치)

서울시,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 추진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2016. 1. 12.

서울시는 문화유산을 도시 정체성 확립과 도시가치 제고의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그동안 경제 논리에 가려 무분별하게 개발·유실되어 온 문화유산을 지키고, 문화유산의 체계적 파악·관리·활용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2015년 7월부터 진행하여 2016년 3월 마무리할 예정이며, 역사·도시계획·인문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5인으로 ‘역사도시 서울 추진위원회’(위원장: 조광 서울시사편찬위원장)를 구성하여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2월과 3월 중에는 서울시 엠보팅(M-Voting)을 활용하는 한편 정책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시의회와 협의하여 ‘역사도시 서울 기본조례’ 제정 또한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시, 건축자산 보수·복원사업 및 관광자원화 추진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2016. 1. 6.

인천시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근대 건축자산 보수·복원과 이를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근대 역사·문화적 가치와 상징성을 갖고 있는 노후·훼손 근대 건축물에 대한 보수·복원사업을 진행하며, 이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축명소 관광인프라를 개발·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인천발전연구원 정책과제로 ‘인천 가치 재창조를 위한 건축자산 기초연구’ 용역을 진행하게 되며, 보수·복원 사업에 시비와 군·구비 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군·구 공모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보수·복원사업을 거친 이후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인천시 중구 개항장 일대에는 문화재 5개 동 등 모두 60개 동의 근대 건축물이 군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도시 가운데 근대 건축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인천시 중구 일대의 근대 건축물



인천우체국



일본 제1은행

자료: 인천시 보도자료, “인천시, 건축문화 가치 재창조 추진”, 2016.1.6.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자체 움직임 본격화

전주시 여성청소년과
2016. 1. 22.

군산시
2016. 1. 27.

수원시 보육아동과
2016. 1. 2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CFC) 인증을 목표로 한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친화적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최근 아동범죄·아동학대 사건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2016년 지자체들의 중요 시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니세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지방정부의 시스템에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권과 관련된 열 가지 조건*을 충족한 지자체에 대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3년 서울 성북구가 최초로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성북구를 포함해 27개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하여 인증 획득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전주시는 최근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과 아동의 권리 증진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 발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시는 지난해 12월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여 아동친화적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올해는 ▲법령과 시책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 실태조사 실시 ▲돌봄센터, 아동도서관, 유아 숲체험장 등 인프라 확충 ▲아동 관련 NGO와 협력하여 아동 권리 교육·홍보 전개 등의 사업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군산시는 '어린이 행복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2016년에 도시공간을 개선하고 아동 행복과 권리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어린이 참여권 실현을 위하여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을 본격화하고 어린이 시청 홈페이지를 오픈한다. 아동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가 확대되며 찾아가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도 추진된다. 숲체험, 놀이교실, 직업체험교실 등 다양한 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동화의 숲',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 어린이 편의시설 확충 등과 같은 아동 행복을 위한 시책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수원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1월 발의한 데 이어 공직자와 관련 업무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친화도시의 개념, 해외 우수 사례, 아동권리협약 이행의 중요성 등을 관련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시는 현재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 제정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다.

* ①아동의 참여권 보장 ②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마련 ③아동권리 전략 개발 ④아동권리 전담기구 마련 ⑤아동영향 평가 마련 및 실시 ⑥아동 관련 예산 확보 ⑦정기적인 아동실태 보고 ⑧아동권리 홍보 ⑨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기구 마련 ⑩아동 안전을 위한 환경과 정책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서울형 추진체계 도입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주거재생과
2016. 1.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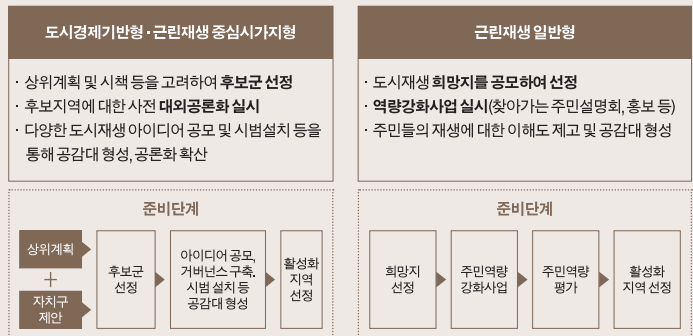
서울시는 도시재생 추진에 있어 주민 중심, 현장 중심의 단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2016년부터 이를 적용하여 서울형 도시재생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기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적용되었던 '계획 → 실행 → 자력 재생' 3단계에 '준비단계'를 추가한 '주민역량강화 4단계 프로세스'를 도입, 적용하게 된다. 이는 주민 공감대와 추진역량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주민주도 도시재생을 달성할 수 없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가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법정계획인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해 도입한 절차이다. 이에 따라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2단계 지정 전 희망지역에 대해 약 1년간 주민 교육, 주민협의체 조성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시행된다.

주민역량강화 4단계 프로세스

준비단계 (씨뿌리기, 희망지)	계획단계 (활성화지역)	실행단계 (활성화지역)	자력재생단계 (자립구역)
주민 교육, 공론화, 주민역량강화사업 주민제안사업 시행 공동체활동 공간 지원 등	활성화계획 수립 지역의 비전 설정 활성화 사업 선정	주민과 함께 사업 시행 주민자립기반 마련	지역의 자생적 운영관리 지속성 확보
관심·참여 (도입기)	함께·협력 (성장기)		중심·주체 (정착기)

또한 대상지 선정 시 도시재생 파급 범위에 따라 ▲도시경계기반형(광역 차원)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도심활성화 거점) ▲근린재생 일반형(노후 저층주거지)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차별화된 준비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세종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과 대체교통수단 적극 모색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과
2015. 11. 19.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과, 교통과
2016. 1. 7.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과
2016. 1. 14.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확정

정부는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유치 방식을 통해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29km(6차로)의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발표하였다.

먼저 서울~안성 구간(71km)이 2022년 개통을 목표로 2016년 말 착공에 들어가며, 안성~세종 구간(58km)은 2022년에 착공해 2025년까지 개통시킬 계획이다. 충북에서도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기~오송 지선 건설도 추진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서울~세종 통행시간이 70분대*로 줄어들어 국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이 약 60% 감소하고, 통행속도가 약 10km/h 증가하여 연간 8,40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RT 도로와 순환도로망 완성

세종시 4·5생활권을 연결하는 BRT 도로가 1월 개통되면서, 세종시의 순환도로망이 완성되었다.

새롭게 개통된 구간은 행복도시 4생활권과 5생활권을 통과하는 왕복 6차선 도로(7.4km)로, 이로써 환상형 순환도로망(22.9km)을 완성하여 신도심 모든 지역을 20분 내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시는 내부순환 BRT 도로의 개통에 따른 교통량 분산으로 신도심 교통정체가 해소되고 지역 간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자전거, 근거리 생활교통수단으로 활용

최근 세종시가 수행한 2015년 어울링 이용현황 분석에 따르면 어울링의 총 대여 건수는 11만 7,475건(1일 평균 322건), 총 이용회원은 3만 8,372명(시 전체 인구의 18.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호수공원 주변과 세종청사·BRT정류장 주변 대여소 이용률이 높고, 출퇴근 시간대에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울링이 대중교통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앞으로 생활권과 BRT 정류장과 연계할 수 있도록 대여소를 확충하는 등 어울링이 생활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힘쓸 방침이다.

* 소요시간이 평일 108분, 주말 129분에서 건설 후 74분으로 단축 예상

부산시, Active Healthy City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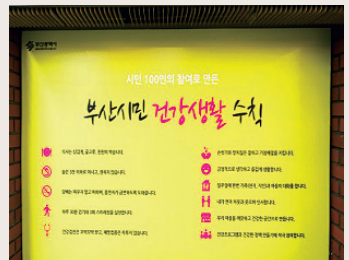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건강체육국 건강증진과
2016. 1. 18.

부산시가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시민의 비만을 감소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Active Healthy City 조성 시범사업'을 도시철도 부산역에서 벌였다.

Active Healthy City 조성 사업은 바쁜 일상 속에 별도의 시간과 비용 투자 없이 일상생활 패턴이 신체활동이 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철도 부산역에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자연경관 이미지를 계단에 래핑하여 '걷고 싶은 계단'을 조성하였으며 ▲대합실 기둥, 승강장, 발매기 하단에 점프, 멀리뛰기, 균형감각 테스트 공간 등을 조성해 어디서든 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부산시민이 만든 열한 가지 건강생활수칙을 승강장 벽면에 부착하여 건강생활실천 메시지를 전달하고 ▲도시철도 1~4호선 전동차 및 승강장 전광판을 통해 일상생활 신체활동 동영상을 내보내기도 하였다.

시는 일상생활 속 신체활동 놀이문화를 확산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 시키려는 Active Healthy City 조성사업을 꾸준히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역 Active Healthy City 조성 시범사업

자료: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일상이 운동이 되다! 주변이 운동장이다", 2016.1.18.